

6·3 지방선거 출마자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민중 민형배 후보, 광주·목포 '12주기 기억식' 참석 정의 강은미 후보는 추모 피켓팅...“사회안전 강조”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일제히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에 나섰다. 출마자들은 희생자들에 대한 넋을 기리면서도 반복되는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며 사회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이날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광주와 목포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했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용영정전 천변공원 '기억의 공간'에서 열린 수완지구 기억식과 오후 목포신항에서 진행된 기억식에서 각각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과 책임의 의미를 되새겼다.

수완마을춧돌모임 주관으로 열린 광주 기억식은 '열두 번째 봄, 기억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주제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과 책임의 가치를 되새겼다.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노란리본 작성'과 '기억의 돌' 만들기 진행됐고, 시 낭독과 추모 노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그날의 슬픔을 기억하고, 그날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

다"며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그 아름다운 영혼들이 추위와 통곡을 이겨내고 다시 꽃으로 피어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억식이 열린 '기억의 공간'은 민 후보가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기억의 나무' 식수를 계기로 조성된 곳이다.

목포신항 기억식에서 민 후보는 별도의 발언 없이 뒷자리에서 조용히 참관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노란 종이배를 날리는 추모 퍼포먼스에 참여한 뒤 현화에 동참했다.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도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서구 용암사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피켓팅에 참석했다. 그는 "세월호 당시 슬픔과 기억을 잊지 않고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 온전히 보장받는 안전한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학동, 화정아이파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 특별시가 사회적 참사와 중대재해를 시민의 편에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무한책임



이재명 대통령과 김해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추모 리본을 들고 4-16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광남일보**

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병규 후보도 수완동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시민들과 추모의 마음을 나눴다. 박 후보는 노란리본 쓰기와

단원고 학생 250명, 교사 11명, 일반인 43명 등 희생자 304명을 상징하는 '기억의 돌'을 쌓으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다짐을 하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조국혁신당 명창환 여주시장 예비후보

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 지역 안전체계 전면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명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상황 지원과 대응 총괄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이후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 과정에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 방산, ‘완결형 산업구조’ 도약을”

기아 오토랜드 광주서 김병주 의원 주관 방산업체 간담회 군용차·우주·드론·제조 연결 ‘연구-시험-생산-정비’ 구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사신)이 전남·광주를 '완결형 첨단 국방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1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열린 전남·광주지역 방산업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사업장을 시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을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남

·광주에 이미 구축된 방산 기반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양산, 정비 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형배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군택·안도걸·정준호·정진욱 국회의원, 기아를 포함한 나전, 아성프라텍, 광일기공, 호원, 동방산업, 코비코, 지앤씨, 코진테크, 현대하이텍 등 10개 방산 협력 업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방산 현장의 현황을 정취하고, 업체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산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 의원의 간담회에서 "전남·광주는 방산을 유지해야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미 군용차를 만들고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군용차가 생산되고, 전남 고흥에서는 우주발사체를 시험하고 있으며, 동부권에는 철강과 화학, 정밀가공 등 강력한 제조 기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지역의 방산 인프라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



하며, "군용차, 우주, 드론, 제조를 하나로 연결해 연구·시험·생산·정비까지 지역 안에서 끝나는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의 AI 역량을 더해 자율주행 군용차, 무인 드론, 전장 데이터 분석 등 미래 국방 기술을 전남·광주에서 개발하고 실증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전남의 에너지 기반과 국방 산업의 연계를 통한 산업 확장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핵심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산업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전남의 에너지와 결합한 '에너지·국방 융합 산업'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정선, 민형배와 ‘교육-시정 협치’ 제언

교육-자치 통합모델 구축 등 협치 실현 3대 과제 제시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예비후보(사신)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특별시장 후보에게 정책 연대를 제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16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후보의 핵심 공약과 자신의 교육 정책을 결합한 '전남·광주 교육-시정 상생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교육과 시정이 따로 갈 수 없다"며 "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김영록 후보의 공약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통합과 협치의 기초를 분명히 했다."

이 예비후보는 "민 후보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철학은 교육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지역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협치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로 △교육-자치 통합모델 구축 △공공 돌봄 확대 △상시 협의체 운영을 제시했다. 먼저 '전남·광주형 교육-자치 통합모



델'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구상이다. 시정의 마을 자치 인프라와 교육청의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배움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무한 책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반영해, 소외 지역 없이 균등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로 교육과 시정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교육-시정 타운룸 미팅'과 '전남·광주 교육-시정 협의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공약을 검토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상설 협의기구 성격이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민심은 갈등을 멈추고 하나로 나아가려는 요구"라며 "민형배 후보와 함께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자 아이 키움 확대 △상시 협의체 운영을 제시했다. 먼저 '전남·광주형 교육-자치 통합모

국힘 이정현 “국내 첫 메가시티 모델 구현”

산업 중심지로 재설계...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신)가 16일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 메가시티 모델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단순한 통합이 아

닌 경제권 통합이고 산업 구조 재편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첫 실험이다"며 통합특별시의 메가시티 모델 구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전남 통합 선언,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



규제 프리존 도입 △(3년) 산업·에너지·교통 통합, 기업 유치 집중, 경제권 완성 △(5년) 완전 자치 경제 구조, 글로벌 도시 도약 등 3단계 실행 계획을 주장했다. 특히 메가시티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산업 중심지로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광주는 AI·미래차·분산 기능을 맡고 광주·여수는 철강·이차전지·에

너지, 서남해는 해상풍력·수소, 무안·목포는 물류·공항 등 기능 분산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현 예비후보는 "(특표율) 30%의 혁명이 이뤄지면 국민의힘 주도로 메가시티 특별법, 미래산업 특별법의 관철과 삼성, SK, 현대, 한화, 포스코 유치를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다"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초 메가시티로 만들어 대기업이 몰려오는 산업 중심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AI 에너지 특목고, 무안에 설립해야”

나광국 예비후보, 김대중 교육감 예비후보와 교육연대

나광국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예비후보(사신)가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대중 예비후보와 정책 협력에 나서며 'AI 에너지 특목고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대비한 교육 정책 방향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두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추진 흐름 속에서 향후 교육 정책은 지자체



와 교육청, 산업계가 함께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지역 리더십 간 협력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오흥지구 교육 인프라 구축 성과를 언급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오흥고 신설은 김대중 교육감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무안을 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추진 흐름 속에서 향후 교육 정책은 지자체

“정치검찰 조작수사 의혹, 진상 규명을”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 국정조사·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사신)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차 후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앞에 드러난 정황은 단순한 수사 논란이 아니라 검찰권이 정적 제거에 동원됐다는 중대한 의혹"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문회 증언을 인용해 쌍방을 대복속금 수사와 횡령·배임, 추가조작 수사가 사실상 한 통에 AI 에너지 특목고 설립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또 방울철 관련 진술과 횡령, 검찰의 불기소 및 무혐의 처분 정황 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의혹으로 규정했다. 쌍방을 관련된 4532억 원대 배임과 추가조작 등 사건이 지연되거나 축소된 반면, 특정 인물을 겨냥한 수사가 집중됐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특위는 대검찰청 차원의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윤영주, 보성군수 무소속 출마 선언

“정치 아닌 성과 중심 행정”...균정 방향 제시

윤영주 예비후보(사신)가 16일 무소속 보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성의 새로운 변화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보성군수 선거에 출마한다"며 "기존 정치 중심 군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행정 중심의 군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성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보성의 미



래를 답보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대표 공약으로 '보성형 햇빛연금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했다. 군민 모두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유출, 지역경제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